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정재철

(동신대 신문방송학과)

이 논문은 언론개혁에 관해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의 신문기사들을 대표적인 텍스트로 삼아 신문들의 사회적 담론 생산 기제의 문제점들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분석해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조선일보≫ 진영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워 생산하는 좌/우의 이념 대결 담론이 한편으로는 ≪조선일보≫ 자체의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지닌 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좌/우 이념 대결 담론은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류언론에 내재된 모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언론개혁 요구를 반공 이데올로기 층위의 모순과 접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개혁을 좌/우 이념적 관계의 문제로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언론 운동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개진해온 언론개혁의 요구를 견제하고 냉전적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켜 극우적 법질서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언론개혁 담론의 논의의 핵심이 이념 담론에서 제도 개선에 관련된 담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오늘의 언론개혁 담론에서 비롯된 이념 담론은 진보와 보수이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야 할 것도 제안한다.

[키워드: 언론개혁, 담론분석, 담론적 효과, 접합]

* 이 글은 2001년 한국언론학회에서 개최한 '언론개혁의 쟁점과 이론적 조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다시 논문의 형식에 맞게 수정 보완했음을 밝힌다.

1. 들어가는 말

2001년 6월 28일 그 동안 4개월에 걸쳐 벌여온 언론사 세무조사와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 국세청이 중앙 언론사에 5천56억 원이라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힌 일은 세간에서 "한성순보 창간이후 언론계 최대의 사건"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 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조세정의 차원의 정기적인 세무조사 차원이었는지 혹은 비판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을 겨냥한 김대중 정권의 언론탄압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조선≫·≪중앙≫·≪동아일보≫ 그리고 이를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식인들에 의해 생산되는 언론탄압 담론과, 시민언론운동단체들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언론개혁과 세무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언론개혁 담론들은 골이 깊은 대결 국면에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언론사를 포함해 어느 사기업이건 간에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세무조사의 문제가 신문사와 정권, 신문사와 신문사, 야당과 신문사, 여당과 야당간의 비가시적인 이해관계와 세력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의 정치적인 혹은 사회 민주화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도기 상태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이른바 '언론개혁' 정국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식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개혁의 실천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1] 비록 세무조사에 대한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는 많은 국민이 심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반복되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7월 이후 각계 각층에서 분출된 언론개혁지지 활동은 오늘날 언론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2)]

그러나 사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개혁에 관련된 논의는 개혁 이슈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고 언론개혁의 제도적 실천은 상당히 어렵거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을, 신문이 생산하고 있는 언론 개혁에 관련된 담론의 구성 방식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에서 찾아보려는 것이다.

어느 국민이라도 언론개혁에 관련된 신문의 보도 기사를 조금만 관심있게 읽어보아도 신문사들마다 자사의 이해관계 혹은 우리 사회 내부 각 세력 분파들과 맺고 있는 이해관계 내지는 공생관계에 따라 논조와 관점이 다르고 사안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언론 개혁의 이슈들을 개혁/반개혁의 구도 속의 어느 한편에 서서 바라보도록 강요하고 있다. 왜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연구 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특히 언론개혁논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던 김대통령의 1월 기자회견 직후부터 8월초까지 7개월간의 언론개혁 관련 기사들을 예비조사하면서, 신문사들에 의해 의제화되는 언론개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생산

1) 조항제(2001)는 한국의 주류 미디어가 지금까지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역사적 공과로(유신 및 5공 치하) 볼 때 국민을 대변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2) 김동규(2000)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소수 중심의 폐쇄적인 소유구조, 선거와 같은 중요한 국면마다 재기되는 보도의 불공정성, 편파성, 지나친 상업주의와 과다한 경쟁과 비정상적인 경영구조로 파악"한다.

방식은 신문기사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단 언설들이 생산되면 중층적으로 겹쳐지면서 특정한 내용의 의미들이 구성되고 일정한 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비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 글은 특히 언론개혁에 관해 양극화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대표적인 텍스트로 삼아 사회적 맥락 안에서 분석해봄으로써 신문들의 사회적 담론 생산 기제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밝히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을 분석하는 연구 방법의 선택에는 두 가지 점이 고려되었다. 첫째는 기사의 전체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언론개혁 관련 기사의 특성과, 기사가 생산해낸 담론의 의미와 의미 구성 방식을 파악하는데 에는 내용분석을 통한 체계적이며 양적인 접근 방법도 담론의 내용과 구성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3] 두번째는 사설이나 특정한 칼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개혁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신문 기사의 유형도 고려되었다. 강형철(1999)에 의하면 신문의 보도영역은 기사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보도영역과 비객관적 보도영역으로 나뉜다.

첫번째 유형 (I)은 객관성의 영역으로서, 객관성은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으로 이루어진다. 두번째 유형 (II)는 비객관의 영역 가운데 당파성의 영역으로서 사설처럼 주관적 선택상황에서 드러내 놓고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번째 영역 (III)은 해설처럼 비의도적이며 공개적으

3) 이 부분은 앞서 소개한 김동규의 연구 결과로부터 참고하였다.

<표 1> 신문의 객관적/비객관적 보도영역

객관의 영역	비객관의 보도영역		
		공개적	비공개적
I 뉴스: 사실성 불편부당성	의도적	II 사설:당파성	IV 뉴스:선전
	비의도적	III 해설: 주관성	V 해설: 이데올로기

로 나타나는 편향적인 주관성을 말한다. 네 번째 유형인 (IV)인 선전은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의 표현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한 비객관성을 말한다(강형철, 1999, 124쪽).

이처럼 보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어서, 사설이나 칼럼과 같이 기사의 내용에 당파성이 허용되는 기사와,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와 같이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의 견지를 전제로 하는 기사에는 그 특성상 분석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스트레이트 뉴스를 신문과 독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담론의 한 형태로 보고, 그러한 뉴스가 생산하는 담론적 의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객관성(사실성, 불편부당성을 포함한)이라는 사실을 분석의 중요한 요인으로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의 담론 구성방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 내용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당파성을 전제로 한 칼럼과 사설 및 해설 기사의 경우는 기사의 내용을 텍스트로 삼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적 담론 분석 방법이 행해졌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일견 분리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분석으로 얻어진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의 불편부당성과 사실성 차원에 기초한 언론개혁 관련 담론의 의미 역시 사설과 칼럼 등에서 생산되는 담론 내용의 근본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자료로서 이용되었고, 동시에 신문의 담론 생산의 다층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스트레이트 뉴스의 내용분석 결과와 사설과 칼럼의 담론 분석 역시 동일한 사회적 맥락[4] 내에 접목시켜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

써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했다.[5]

부가할 점은, 언론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이 한국 언론에 내재된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체험과 인식의 차이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정치성향과 실천행동 사이의 극단적인 충돌과, 대립적인 이해관심들의 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연구 관점의 접합이론(articulation theory)[6]을 통한 이론적 틀로 언론개혁 담론을 분석하려 시도했다. 접합이론은 사회집단들과 이념들 사이에 성립된 관계를 설명하고, 어떤 역사적인 문맥들 안에서 그러한 관계들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다시 말해 접합이론은 어떻게 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 어떤 담론 내에서 서로 일관성을 띄게 되며, 그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국면에서 어떠한 정치적 주체들에 접합되거나 혹은 접합되지 않는지를 반문해 보는 하나의 방식이다(Hanczor, 1997). 따라서 이 이론을 통해 언론개혁 담론의 생산 주체들과 담론적 실천 그리고 사회적 세력과 이데올로기적 요소들 간에 관계를 맥락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언론개혁 정국의 전체적인 국면을 이해하려 시도했다.

---

4) 강명구와 박상훈(1997)은 텍스트에 대한 내용분석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용분석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의미지워지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는 것이다.

5) 담론 분석이란 인간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난 언어적/비언어적 산물인 담론을 분석하여 담론 내에 구성된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현실을 찾아내는 다양한 시각들을 총칭하는 연구 방법을 뜻한다.

6) 홀(Hall, 1985/1996)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접합은 서로 다른 두 요소를 특정 상황하에서 통합할 수 있는 연결 형식이다. 그것은 항상 필연적이거나, 결정된, 절대적인, 필수적인 것이 아닌 연결이기 때문에 어떤 담론의 통일성(unity)이란 서로 다양하고 서로 구분되는 요소들을 접합시킨 것인데, 이들은 아무런 필연적인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접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요성을 띠는 통일성은 어떤 담론과 이것이 어떤 역사적 조건 아래 연결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될 필요는 없는 사회적 요인들이 접합함으로써 생겨난 연결이다."

1) 분석 대상 및 조사 기간

분석대상 신문으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선정했다.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주류 보수신문이면서 자율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신문인 반면, ≪한겨레신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창간정신으로 국민주 모금을 바탕으로 창간된 이래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통한 언론개혁을 한결같이 주창해온 신문으로서 언론개혁 담론의 특성을 뚜렷하게 대비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조사기간은 2001년 1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한정되었다. 이 기간을 선택한 이유는,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언론개혁 발언을 시발로 언론개혁관련 기사가 신문지면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8월 10일은 검찰이 세무조사에 관련된 수사를 최종 종결지어, 전체적으로 볼 때 언론개혁 정국의 한 단계를 매듭지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언론개혁관련 신문기사들은 한국언론재단의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인 KINDS에 '언론개혁'이라는 검색어를 통해 검색되었다. 분석된 기사 수는 ≪한겨레신문≫ 기사 429건, ≪조선일보≫ 236건으로서 총 665건이었다.

2) 분석 방법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한 언론개혁 관련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의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기사유형', '주요 정보원', '기사의 주제별 분포', '기사제목의 방향성' 4가지를 분석유목[7]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유목들은 본고의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유목의 특성상 대립되는 언

7) 내용분석에 포함시킬 분석 유목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김동규의 논문 등을 참고로 본고의 연구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유목만 취사선택했다. 나머지 부분은 이후 해석적인 담론분석에서 충분히 상호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론개혁 기사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 제목의 방향성은 신문사들이 첨예하게 견해를 달리하는 언론개혁 이슈에 얼마나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를 잘 예시해 줄 수 있는 분석유목이다.[8]

이와 함께 사설과 칼럼 그리고 해설 기사들의 경우 그 내용을 텍스트로 해서 담론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본고에서는 1월 초에서 8월 초까지의 중요시기별 언론개혁관련 담론의 구성방식과 의미를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담론의 주제구조', '주제영역'과 '중요한 언술'들 그리고 '담론적 실천'을 텍스트의 질적 분석을 위한 범주로 삼아 '어떤 의미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선택 및 배제되고 부각'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9] 이를 위해 전체적으로 언론개혁에 관련된 담론들은 시기별로 부각된 네 가지 주제 영역(세무조사, 신문고시, 언론자유, 언론개혁 이념)으로 분류했으며, 각 주제 영역별로 사설이나 칼럼에서 주장된 중심적인 언술들로 구성된 대립된 담론들의 의미들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했다.

---

8) 앞서 소개한 강형철의 논문은 신문 기사제목을 효율적으로 내용분석했음.

9) 신문에서 생산된 담론의 보다 거시적인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소개한 강명구와 박상훈이 정치상징 담론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던 담론분석 방법을 본고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해 적용했다. 강명구와 박상훈은 다이크(Dijk, 1988)의 담론분석 방법을 응용해 정치적 상징과 담론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 논문에서 주제(theme)란 하나의 담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 가를 말하며, 그 주제는 여러 개의 주제 영역으로 이루어진 주제구조를 갖게 된다. 본고에서 언론개혁이 담론의 주제라면, 이 개혁담론은 세무조사 실시, 신문고시 실시 등과 같은 주제 영역으로 구성된다.

3. 내용분석 결과: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의 담론적 의미

1) 기사의 유형

우선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가 언론개혁에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사를 유형화시키는가를 알아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45.7%, ≪조선일보≫의 경우 38.1%로서 지난 1월에서 8월초 사이 세무조사실시, 신문고시 논쟁, 사주 검찰소환 등 언론개혁 관련 사건이 잦은 탓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칼럼/논단, 기획/특집기사가 뒤를 이었는데, 정간법 개정, 편집권 독립과 같은 논쟁이 되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주제 영역이 많은 탓으로 해석된다. 언론개혁 관련 기사를 유형화하는데에 있어서 기사량 외에는 ≪한겨레신문≫나 ≪조선일보≫ 모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신문사별 기사유형

신문	스트레이트	사설	칼럼/논단	기획/특집	해설/분석	독자	기타	합계
한겨레	196 (45.7%)	31 (7.2%)	82 (19.1%)	70 (16.3%)	14 (3.3%)	8 (1.9%)	28 (6.5%)	429
조선	90 (38.1%)	17 (7.2%)	44 (18.6%)	47 (19.9%)	6 (2.5%)	7 (2.9%)	25 (10.6%)	236

* chi-square = 11.22, df=6, p< 0.10

2) 주요 정보원

신문기사의 주요 정보원(취재원)이 누구인가는 뉴스 기사의 불편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한 측면을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신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룰 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공평하게 다루어야 독자들이 그 이슈의 본질과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3>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를 기사화 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정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시민언론운동단체(16.8%), 언론사(13.5%), 야당(10.3%), 정부여당(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일보≫의 경우 야당(19.5%), 정부여당(17.8%), 지식인 그룹(12.7%) 순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시민언론운동 단체에 정보원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언론사와 야당, 여당 역시 고르게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야당(19.5%), 정부여당(17.8%), 지식인 그룹(12.7%) 순으로 언론개혁기사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정보원

신문	정부 여당	야당	언론사	지식인 그룹(언론학계 등)	시민언론 운동단체	국회(국회의원 활동 포함)	기타 (불명확 포함)	합계
한겨레	43 (10%)	44 (10.3%)	58 (13.5%)	29 (6.8%)	72 (16.8%)	15 (3.5%)	168 (39.2%)	429
조선	42 (17.8%)	46 (19.5%)	23 (9.7%)	30 (12.7%)	16 (6.8%)	20 (8.5%)	41 (17.4%)	236

* chi-square=66.33, df=6, p<0.001

3) 기사의 주제별 분포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겨레신문≫은 시민사회의 언론개혁 관련요구나 활동(72%), 정부여당의 언론개혁 관련 정책 및 활동(16.3%), 언론사 자체의 개혁관련 사건 및 활동(1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일보≫는 정부 여당의 언론개혁 관련 정책 및 활동(27.5%), 야당의 언론개혁 발언, 사건 및 활동(14.8 %), 지식인 그룹의 언론개혁 관련 의견 및 대안 제시(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사의 주제별 분포 결과는, ≪한겨레신문≫이 시민언론운동단체나 언론사 내부의 개혁문제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룸으로써 언론개혁에 적극적임을 나타낸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는 야당이나 지식인 그룹의 비판적 주장이 담긴 주제를 많이 다룸으로써 언론개혁에 부정적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기사의 주제별 분포

신문	정부 여당의 언론개혁 관련 정책 및 활동	언론사 자체의 개혁관련 사건 및 활동	시민사회의 언론개혁 관련 요구나 활동	야당의 언론개혁 관련 발언, 사건 및 활동	지식인 그룹의 언론개혁관련 의견 및 대안 제시	국회나 정치권의 언론개혁관련 활동 등	기타 및 하나 이상 중복	합계
한겨레	70 (16.3%)	58 (13.5%)	72 (16.8%)	44 (10.3%)	29 (6.8%)	15 (3.5%)	141 (32.9%)	429
조선	65 (27.5%)	21 (8.8%)	18 (7.6%)	35 (14.8%)	30 (12.7%)	20 (8.4%)	47 (19.9%)	236

* chi-square=49.7, df=6, p<0.001

4)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제목의 방향성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겨레신문≫의 경우 전체 196개의 스트레이트 뉴스 중에서 불명료한 것을 포함 포괄적으로 60.5%를 중립적인 기사제목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90개의 뉴스 기사제목 중에서 47.6%(불명확 포함)이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보도를 전제로 하는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에서도 이미 신문사들이 언론개혁 이슈를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당한 부분의 당파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제목의 방향성

신문사	중립	긍정적	부정적	불명확	합계
한겨레	85 (43.4%)	65 (33.1%)	12 (6.1%)	34 (17.1%)	196
조선	33 (36.6%)	0 (0%)	47 (52.4%)	10 (11%)	90

* chi-square=94.5, df=3, p< 0.001

5)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의 양적인 내용 분석 결과가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의 방향성과 결합해 갖는 함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종합해본다면, 먼저 ≪조선일보≫의 경우 취재 정보원 활용과 기사의 주제별 분포, 그리고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제목의 방향성과 연계시켜 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왜곡과 편파보도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언론개혁에 관련된 뉴스 기사제목의 상당 부분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제목은 신문사들이 첨예하게 견해를 달리하는 언론개혁 이슈에 얼마나 불편 부당하게 접근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 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조선일보≫의 경우 언론개혁에 관련된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에서 중립적인 기사제목은 적은 반면 "언론 세무사찰은 제2의 유신", "야 국정조사 관철키로"(6. 29 뉴스)와 같이 기사제목이 상당히 부정일변도의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취재 정보원 활용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1월 10일에서 8월 10일 사이 ≪조선일보≫는 시민언론운동단체의 활동에 대해 7월까지 거의 기사화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지면에 실린 한두 건의 경우 "새 통신사 설립 언개련서 막아—최해운 NSK대표 주장"(2. 28 뉴스)과 같이 시민언론운동단체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7월 이후 언론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던 (시민언론운동단체외의) 시민사회단체에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다음의 기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국경없는기자회 성명을 인용해서) "한국정부 언론세무사찰 비난"(4. 11 뉴스), (편집인협회에서 행한 신문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인용해) "개혁빙자 언론자유 침해"(4. 27 뉴스), IPI 성명요지 "정치적 동기 세무조사 탈세혐의 고발 우려"(7. 4 종합 텍스트), "마이너신문 시민단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비전@한국' 발표문 요약"(7. 24, 종합 텍스트), "비판신문 재갈물리는 언론탄압 중단하라" 헌변 등 10여개 단체 집회(7. 28 뉴스).

이러한 경향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8년 2월 25일부터 1999년 8월 24일까지 김동규가 언론개혁에 관련한 언론사들의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김동규의 조사결과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언론사일수록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의제화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10] 이러한 경향은 "언론개혁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 지형 자체를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일시적인 주의, 주장으로 폐쇄화, 협소화시켜 사회적 여론화를 제어하는 전략적 기제로 작동시켰다"(2000, 87쪽)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2월 이후에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언론개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화되면서부터는 ≪조선일보≫가 선호하는 유리한 정보원을 선택하여 편향적인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 ≪조선일보≫의 문제점은, <표 3>와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당에서 행한 언론개혁 관련 스트레이트 뉴스의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야당의 언론 개혁 관련 발언 및 활동을 주요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로 다루면서 야당의 주장을 가감없이 인용해 뉴스의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

10) 구체적인 자료는 김동규(2000)의 논문을 참고할 것.

"'현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한나라 '세무조사' 비난"(2. 1 뉴스), "야, 타율적 언론개혁에 방송 이용말라"(3. 2 뉴스), "DJ 언론개혁, 재갈 물리려는 것"(1. 13 뉴스), "방송이 언론탄압 도구냐" "야, 문광위 질의"(2. 20 뉴스) "봐줄 땐 가만있다 비판하니 세무사찰"(2. 16 뉴스), "야도 신문고시 헌소결정"(4. 18 뉴스).

이 기사들의 예에서 스트레이트 기사제목 자체가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미 언론개혁 이슈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뉴스의 생명인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겨레신문≫의 경우를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볼 때,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와 같이 어느 한가지 부류의 정보원을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거나 언론 개혁에 관련된 기사에 획일적인 일방향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이슈의 사안별로 그리고 시기별로 편파적인 기사제목, 중립적인 기사제목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문고시에 관한 보도나 6월 28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신문사들간의 담론적 대립이 격렬해 지는 시기에 이런 보도 경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기사 예들을 살펴보자.

"언론 세무조사 2라운드/야, 정부 딴죽 넘어 언론 편가르기"(2. 10 뉴스), "신문고시 후퇴 우려"(4. 7 뉴스), "신문고시 발목잡기"(3. 31 뉴스), "족벌 신문 신문고시 뭇매"(4. 11 뉴스), "한나라 신문고시 파상공세"(4. 17 뉴스), "조선 기자총회 결의문 발표 반응/기자들 탈세 사주에 굴종"(6. 28 뉴스)

이와 같은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 제목들은 상당 부분 신문고시 후퇴나 비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를 기사제목에서 이미 함축하고 있고, 6월 28일 뉴스기사에서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사주에 굴종하는 부정적인 기사와 의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신문사의 시각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의 경우,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2. 1 뉴스),

"언론개혁법안 입법추진"(1. 18 뉴스)과 같이 중립적인 기사나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한나라 '언론목죄기'"(2. 1 뉴스), "언론개혁도 장기집권 음모/이 총재 공포정치 규정"(1. 17 뉴스)과 같이 한겨레신문사의 입장과 배치되는 기사 역시 다양하게 싣고 있어 ≪조선일보≫의 보도방식과는 객관성의 차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한겨레신문≫ 역시 전체적으로는 약 40% 가까이 기사제목에서 중립성을 상실하고 있어서 언론개혁 이슈에 관한 한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제목에서 상당부분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해 본다면 언론개혁에 관련된 스트레이트 기사의 내용분석이 주는 함의는, ≪조선일보≫의 경우, 앞서 강형철(1999)이 제시한 언론의 보도영역 중 네번째 유형인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의 표현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한) 비객관적인 '선전' 영역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언론개혁관련 스트레이트 뉴스를 위치시킴으로써 이미 뉴스의 담론 생산 양식이 왜곡된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겨레신문≫ 역시 그 정도에 있어서 ≪조선일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언론 개혁에 관련된 스트레이트 뉴스를 기사화 하는데 있어서 개혁선호적인 유사한 양상을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제목에서 보이고 있어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기사의 편파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언론개혁 관련 스트레이트 뉴스 기사에 관한 한 신문사마다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유리한 사건은 독자들에게 부각되게 보도하고 불리한 사건은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보도경향을 보임으로써 한편으로는 하나의 사건이 신문지면을 통해 가치판단과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11) "언론의 왜곡보도는 흔히 기사나 정보의 취사선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왜곡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사건의 특정 측면만 부각시키고 또 다른 측면은 무시하거나 배제할 때 사건의 포괄적 진실은 은폐되고 왜곡"된다. 박정순(2000)을 참고할 것.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사간 언론개혁을 둘러싼 담론적 대립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예시해 주고 있다.

4. 비객관적 보도 영역에서 생산된 언론개혁관련 담론분석

우선 간략히 2001년 1월부터 8월 초까지 언론개혁이 신문지면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주요사건들을 간추려보기로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언론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8년 8월 27일 33개 언론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에 의해서지만, '언론개혁' 문제의 전국적인 공론화는 2001년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이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의 언급 이후 잇달아 지난 2월 1일에는 국세청이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정기법인세 조사를 서면으로 통보했고, 2월 말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부활방침을 밝혔으며, 2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해 단일 업종으로는 최대 조사인력이 투입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포함한 중앙 언론사에 5천56억 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검찰에 5명의 사주가 고발되고 그 중 3명의 사주가 구속 수감되었다.

언론개혁을 둘러싼 담론들은 시기별로 4가지 주제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번째 주제영역은 '세무조사' 관련 담론들인데 1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언술들이 생산되었다. 두번째와 세번째 주제영역은 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시행 발표후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서 신문고시와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담론이다. 마지막으로는 6월 28일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격렬해진 논쟁 속에 등장한 이념논쟁이다.

우선 주제영역별로, 담론 생산주체, 담론구성을 위해 사용된 주요 언술들과 그러한 언술들을 통해 어떠한 담론적 실천이 있었는지 간략히 정리 요약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논의해보기로 한다.

1) 주제영역별 담론 요약

(1) 세무고사를 둘러싼 담론; 조세정의 대 언론 탄압

<표 6> 세무조사 담론

담론 생산 주체	주제 영역	담론 구성을 위해 사용된 주요 언술들	담론적 실천
한겨레, 제도개선 통한 언론개혁지지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그룹	언론사 세무조사	- 법과 원칙 준수 - 정례적인 세무조사 - 세무조사의 공정한 법 집행 감시	-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구현 - 세무조사와 함께 권력감시 필요
정부 및 대다수 여당 국회의원	언론사 세무조사	법과 원칙 준수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구현
조선, 자율 언론개혁 지지 야당 국회의원, 시민 사회단체 및 지식인 그룹	언론사 세무조사	- 세무조사의 규모, 시기, 방법 불공정 - 법치주의 위배 - 언론사 경영의 위기 유발 - 정부의 언론사 재편 음모론 - 권·언 불유착이 언론탄압 배경	- 세무조사는 비판적 신문 길들이기이며 언론사를 재편하기 위한 것. - 세무조사는 법치주의의 형평성 위배

언론개혁이라는 담론의 주제 영역 중 가장 먼저 사회적인 의제로 떠오른 것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련된 것이다. <표 6>에서 요약된 것처럼 ≪한겨레신문≫, 시민 언론운동단체, 언론개혁지지 지식인들은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정례화할 것을 주장한다. 동시에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권력에 대한 감

시가 필요한 점도 강조한다. ≪한겨레신문≫의 이러한 인식은 "세무조사로 드러난 언론사 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사들만은 성역이라는 언론의 잘못된 특권의식과 언론을 정권 창출과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역대 정권이나 정당들의 부도덕성이 결합해 낳은 우리 사회의 비극"(7. 2 기획)이라는 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는 언론사 역시 다른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세무조사의 시기, 방법, 추징 금액에 비추어볼 때 이번에 이루어진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당치 못한 법 집행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비판적 신문의 길들이기가 되며 법치주의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치인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다루어진 기사들의 중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예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언론 문건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기초해 볼 때 세무조사는 표적조사라는 심증이 간다"(2. 15 사설), "우리는 논조나 기사와 관련해 정권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다." "갑자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형평의 문제가 나온다"(6. 28, 시론), "현 정권은 언론을 탈세와 불공정 거래 등을 일삼는 범죄집단으로 매도"(7. 4 시론), "지금 우리는 권력과 유착하지 않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7. 14 칼럼)

이와 같이 ≪한겨레신문≫과 언개련, 민언련 등과 같이 시민언론 운동단체들로 대표되는 제도개선을 통한 언론개혁 지지세력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자율 언론 개혁지지 세력간에는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방침이 발표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상호 대립되는 담론들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세무조사 실시와 더불어 진행된 자율 언론개혁 지지세력들의 대대적인 공세는 정부의 언론사 재편 음모론(정치적 의도),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법치주의 공방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된다. 이러한 결과 언론사 세무조사 담론은 '조세정의 구현 대 언론탄압(비판적인 언론 길들이기)'의 구도 속에서 대립적인 함의를 갖추게 된

다.

이 첫번째 주제영역에서 ≪조선일보≫ 진영에서는 '세무조사'라는 기표가 내포하고 있는 '납세자의 의무'나 '합법적인 공권력'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의미들을 탈접합시켜, 세무조사=언론탄압이라는 다른 함축적인 의미의 연쇄 내에 재접합시키려는 담론적 투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겨레신문≫ 역시 세무조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사회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며 ≪조선일보≫ 진영에 대응하는 국면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신문고시를 둘러싼 담론에는 어떠한 내용과 담론적 실천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 신문고시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담론; 공정 경쟁 대 자유 경쟁

<표 7> 신문고시 담론

담론 생산 주체	주제 영역	담론 구성에 사용된 언술들	담론적 실천
한겨레, 제도개선 통한 언론개혁지지 시민사회 단체, 정부, 여당 국회의원 및 지식인 그룹	신문고시	- 왜곡된 신문시장구조, 즉 독과점체제 개선 - 공정 경쟁 장치 - 신문선택의 자유 보장	-신문고시는 신문사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조선, 동아, 중앙일보, 자율 언론개혁 지지 야당 국회의원 및 지식인 그룹	신문고시	시장경제질서 보존	- 신문고시는 기존 판매체제의 붕괴와 판매현장의 질서를 악화시킴 - 신문고시 부활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함.

<표 7>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언론개혁담론 제2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신문고시의 부활이 필요한가'에 대한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지면논쟁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신문고시 실

시는 '시장 경제'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상징어를 중심으로 독과점, 공정 경쟁, 신문사의 하향 평준화와 같은 체제 이데올로기성 담론들이 잠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먼저 두 세력들 간의 대비를 위해 ≪한겨레신문≫에 등장한 신문고시 담론을 기술해보기로 하자. 다음과 같이 ≪한겨레신문≫은 신문고시는 신문사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한국 신문의 판매 및 광고시장은 시장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왜곡된 구조로 되어있다. 대량의 무가지와 고가의 경품이 살포되고 구독강요 및 강제 투입이 횡행함으로써 독자들은 신문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광고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신문에만 광고를 게재하기 어렵다.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일부 신문이 돈으로 독자를 사서 발행 부수를 부풀리고, 이를 토대로 광고 단가를 올린 뒤, 또 다시 무가지와 경품을 살포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4. 6 칼럼)

≪한겨레신문≫은 이 사례에서 예증하고 있는 것처럼 신문고시는 모든 신문사들이 공정한 경쟁법칙 아래서 경쟁하도록 이끄는 것이며 신문고시의 반대가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신문고시는 파행적 신문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며 언론자유 침해나 특정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가 아니라 족벌언론이 신문의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사회의 활로인 여론의 다양한 형성을 막고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4. 16 사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는 신문고시 부활은 신문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신문협회는 신문고시 부활은 기존 판매체제의 붕괴와 판매 현장의 질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발표, 신문공동판매 의무화는 자율 경쟁을 제한하고 신문사 독자 판단을 무시한 조치로서 신문공동판매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야"(3. 23 기획)

"언론개혁을 둘러싼 싸움은 시장 싸움이다. 이른바 조선 중앙 동아가 갖고 있는 70%의 시장을 군소신문이 어떻게 나눠갖느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 정부가 권력의 힘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민단체의 소유지분 30% 제한은 전체주의 집단주의적 발상이며 사주를 무력화 시키자는 것은 계급투쟁적 측면"(4.5 전문가 좌담)

이상과 같이 두번째 주제영역에서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신문고시에 대해 '공정경쟁 대 자유 경쟁'으로 구도화된 대립적 의미가 담긴 사회적 담론을 창출한다. 이 두번째 국면에서는 ≪한겨레신문≫ 진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호되는 기표의 연쇄인 '자유 경쟁=자유로운 시장질서'라는 지배적인 의미 체계에서 '자유 경쟁=독과점'이라는 부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의 연쇄 내에 접합시키려는 집중적인 공세가 펼쳐졌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신문고시를 부분적으로 정착시키는 제도적 실천을 이루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문고시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언론개혁 담론 주제 영역으로서 언론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가 신문지면에 등장한다.

(3) 언론의 자유 담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유 대 신문사의 자유

<표 8> 언론의 자유 담론

담론생산주체	주제영역	담론구성에 사용된 언술들	담론적 실천
한겨레, 제도개선 통한 언론개혁지지 시민사회단체, 여당 국회의원 및 지식인 그룹	언론의 자유	- 여론을 다양하게 형성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 사주가 독점하는 언론의 자유	신문제도개선은 여론의 다양한 형성을 위한 것
조선, 동아, 중앙일보, 자율 언론개혁지지 야당 국회의원 및 지식인 그룹	언론의 자유	- 신문의 권력 비판 자유 - 자유주의 언론 - 타율적 언론개혁은 비판기능 위축	세무조사와 신문제도 개선을 통한 타율적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

언론의 자유 담론은 1월부터 7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 파상적으로 지면에 등장하는데, <표 8>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한겨레신문≫은 신문의 제도개선을 통해 여론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고 사주가 독점하는 언론의 자유를 독자가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몇몇 사주가 독점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국민 전체의 언론자유로 돌려놓는 것은 한국 현실에서 절박한 것으로서, 법적 뒷받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1. 19 기획), "언론자유를 국민의 진실을 알 자유를 위해 쓰기는커녕, 언론 사주와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행사하는 자유로 착각 (…) 국민 위에 황제처럼 군림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1. 19 기획), "언론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언론사주의 자유, 심지어는 기자들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자유 (…) 언론 사주의 자유에 가려진 언론자유의 본래적 의미를 되살리자는 것"(7. 7 기획), "권언 유착의 역사가 깨진다면 오히려 언론자유의 바탕은 굳어지는 것이 아닌지"(7.31 칼럼)

반면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세무조사와 타율적인 신문사의 제도개선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본다. 다음의 기사 예들을 살펴보자.

"공정위의 역할은 경쟁촉진과 시장기능 활성화, 중립적인 제도운용, 시장의 생동감이 자본주의 체제의 효율을 뒷받침 (…) 규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시장경제는 공동화 및 형해화된다. 신문고시는 특수업태의 불공정 경쟁기준을 인위적으로 설정하려 하면 경쟁을 제약, 공정위가 특정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보호하려는 것은 시장 억압"(5.3 칼럼), "권력과 함께 이룩한 타율적 언론개혁이 언론자유를 상납하는 결과 가져올수도"(7. 6칼럼)

결과적으로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는 언론 자유를 '사주로부터의 언론 자유 대 권력과 규제로부터의 언론 자유'로 구도화 한다. 이 구도 속에서 ≪조선일보≫ 진영에서는 '언론자유=권력과 규제로부

터의 신문사의 자유'라는 의미 체계로 정착시키려 하고 ≪한겨레신문≫에서는 '언론 자유=국민의 알 권리'라는 의미를 접합시키려 시도한다. 이와 같은 언론자유에 대한 논란은 신문고시에 관련된 담론과 중첩되면서, 특히 신문사 사주의 주식 소유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한겨레신문≫ 진영의 주장이 사회주의적 발상 혹은 좌파의 논리로 공격당하면서 '언론개혁'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4) 언론개혁 이념 담론; 민주 언론 대 자유 언론

<표 9> 언론개혁 이념 담론

담론생산주체	주제영역	담론구성에 사용된 언술들	담론적 실천
한겨레, 제도개선 통한 언론개혁지지시민사회단체, 여당 국회의원 및 지식인 그룹	언론개혁 이념	- 제도 개선을 통한 언론의 민주화	언론개혁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한 것
조선, 동아, 중앙일보 자율언론개혁 지지 야당 국회의원 및 지식인 그룹	언론개혁 이념	- 법치주의 존중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보호 유지 - 타율적 언론 개혁은 신문사의 하향 평준화	언론개혁(정간법 등을 통한)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배

<표 9>에서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한겨레신문≫은 언론 개혁은 제도 개선을 통해 언론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따르고 있다. 헌법 제21조 1항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3항에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 언개련·언론노조·기협·민변 등은 신문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자는 배경은 은행(국내 내국인의 시중 은행 소유 한도는 4%)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해 왔다."(4.24 기획)

"언론개혁의 최종적 목표는 언론인들이 사주를 포함해 어떤 세력이나

집단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보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4.26 기획), "언론개혁은 권위주의 정권시절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자는 것이다"(4. 27 칼럼), "신문이 질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강요, 경품 제공 등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유린. 자본을 투자한 신문사주는 경영에 전념하고 신문은 언론인의 손에 맡기는 신문"(6.28 칼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족통합을 위해서라도 족벌사주를 위해 존재하는 언론의 해악을 폭로할 것이라고"(7. 18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언론개혁이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언론개혁 이슈의 본질은 좌/우의 이념적인 대립이라고 주장한다.

"언론개혁의 명분을 내세우고 이면에서는 비판과 이견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사회관을 거부하면서 획일화된 사고와 목소리를 강요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이는 자유언론의 존재의의와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닐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사명감으로 극복"(6.30 사설)

"홍위병을 동원한 선동과 대중조작, 정치권력의 치밀한 조종, 권위의 부정과 비판적 지식인들의 거세 (…) 문화혁명의 악령이 혹시라도 재현되는지 지식인 사회는 뒤숭숭하다"(7.7 기획 연재)

"언론사 세무조사와 대주주 구속문제 등은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좌우의 이념적 대립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 (…) 진보(리버럴)는 보수와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다. (…)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 아니면 동지' 식의 이분법적 대립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좌우의 싸움에 휘말려 있다"(7. 28 칼럼)

"(… 교수는 작금의 사회 현상을 좌파의 2분법적 계급의식으로 추적한다고 인용하면서) 좌파의 논리는 평등주의 적용이며 이것이 좌파가 하고자 하는 개혁이다"(7. 28 칼럼)

이상과 같이, 6월 말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격렬하게 전개된 언론개혁 담론의 마지막 단계인 이념대결 국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민주화를 주장하면 ≪조선일보≫ 진영에서 '좌파 세력'으로 공격하

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면 ≪한겨레신문≫ 진영에서 '기득권수호 우파 세력'으로 비판하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문이 생산한 두 가지 대립되는 담론구성체의 특징은, '조세정의' 대 '언론탄압'이라는 구도로 시작하여, 점차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가 거론되고,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급기야 '좌파' 대 '우파'의 극단적인 대립이 공론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본다면, 언론개혁을 둘러싼 담론 생산의 주체들이 ≪한겨레신문≫의 지면을 통해 생산한 '언론개혁' 담론의 실체는 '조세정의', '공정경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유' 그리고 '언론의 민주화'이다. 반면에 ≪조선일보≫의 지면에서 생산된 '자율 언론개혁' 담론은 '언론탄압' '자유 경쟁' '신문사의 언론의 자유' '자유 언론'에 관한 것이다. 이를 좀더 쉽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정의 : 언론 탄압
공정경쟁 : 자유경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유 : 신문사의 자유
민주언론 : 자유언론

앞서 지적한 대로 이러한 이항 대립적 구도에서 '조세정의', '공정경쟁', '알 권리', '언론의 민주화'가 의미의 등가를 이루면서 이들을 주장하면 ≪조선일보≫ 진영에서 '좌파 세력'으로 공격하고, '언론탄압' '자유경쟁' '시장 경제' '자유 언론' 역시 등가의 영역에 의미들이 위치하게 되면서 이들을 강조하면 역시 ≪한겨레신문≫ 진영에서 '기득권 수호 우파 세력'으로 비판하면서 극단적인 적대적 지형이 형성된 것이다. 7월 이후에는 더구나 종교계를 포함한 다양한 성격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개혁 찬/반 지지 견해를 밝히게 되면서 언론개혁 담론 지형은 생산적인 토론의 장에서 분열과 대립의 장으로 전이된 형세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결국, 좌/우 이념 논쟁은 언론개혁의 중심적인 문제들을 부차적인 이슈로 배제시키고 언론개혁 담론의 초점을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시키는 담론적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2) '언론개혁' 담론 해석하기

그렇다면 언론개혁 담론이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류 신문을 통해 '조세정의 : 언론탄압'에서 '좌/우 혹은 보수/진보'의 이념적 대결양상으로 부상하고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된 양상을 띠게 된 것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과 이론적 틀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겨레신문≫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시민언론운동 단체들의 성격과 운동이 지향하는 언론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윤영철은 신문개혁의 논쟁에서 세 가지 이론적인 관점을 분류한다. 첫째는 시장중심적 자유주의 언론관으로서, 언론의 자유는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 부터도 부당한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하는 불간섭주의와 사상의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관점이다. 둘째는 공동체지향적 자유주의로서 신문의 소유권과 시장경쟁의 원칙에만 매달릴 경우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의견다양성의 원칙이 훼손되므로 공공문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할 수 있고, 소유주의 독선과 시장경쟁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며 그것은 언론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는 반시장주의적 관점으로서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언론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약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하며,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미디어의 해방적 기능을 부각시키고 사회 전체의 지배와 억압에 대한 대항으로서 언론 매체를 인식하는 관점이다(2001, 4-12쪽).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본다면, ≪조선일보≫ 진영이 시장경제 중심의 자유경쟁을 주장하고 언론사 자체의 자율개혁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언론관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겨레신문≫과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주장하는 제도개선을 통한 언론개혁운동에 대해서는, 공동체 지향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혹은 반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한국의 언론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운동이 노동자나 민중을 대변하고자 하는 급진적 민주주의 언론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고(윤영철, 2001, 12쪽), 언개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시민언론운동을 중심으로 평가한다면 운동의 이념이 자유주의적 근대성의 원리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지향적 자유주의 혹은 개량적 자유주의(임영호, 2001, 113-129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한 관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언론운동의 활동 주체와 운동의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언론개혁 운동은 이념적으로 개량적 자유주의의 한계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0여 개 다양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법제 개선운동, 수용자 운동, 대안매체 운동 등 3가지 과제를 내걸고 방송법 민주적 개정, 정간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해직언론인 명예회복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와 같이 언론개혁지지 세력은 한국 언론의 중심적인 문제점은 시장논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수 의견의 다양성을 퇴출시킨 채 독점화를 가져오면서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데 있다고 파악한다(임영호, 2001). 이렇게 볼 때, 시민언론 운동은 정치 이념적 차원의 사회변혁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개선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개량적 자유주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선일보≫ 진영에서 부각시킨 언론개혁에 관련된 좌/우 이념 담론의 본질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던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국민들의 보수적 정서를 자극하고 독자들을 개혁/반개혁의 구도 속에 놓이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의 수행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지난 3공에서 6공까지의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언론개혁' 정국의 사회적 맥락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간략히 정리해보면 이 당시의 집권세력은 통치수단으로써 항상 사상적 다양성을 이분법적 보/혁 구도 속에 강제 징집시킴으로써 '보수대연합'을 구축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연합의 외곽에 포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일체의 비판적 '진보' 세력들을 '좌경 용공' 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집권을 국민들에게 정당화하기 위해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보수와 혁신'의 이분법적 논의를 70년대의 '안보 위기'에서 80년대의 '이념 위기'로 전환시켰었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보수 대 혁신'의 대립 구도는 '자유 민주주의 대 폭력 혁명'으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지배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배집단은 혁신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박호성, 1989, 25쪽).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언론사 세무조사를 시발로 ≪조선일보≫ 진영에서 의제화 한 좌/우 이념 대결 국면 역시 정치적인 맥락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류 보수 언론이 내세우는 보수주의 즉 한국형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앞서 이념 담론의 기사 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자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위 우리 사회의 보수 집단이 지향하는 이념은 역사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기성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주로 작용되어왔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중시하는 기본권, 즉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 학문의 자유가 한번도 제대로 보장된 적이 없었다. 이전의 보수 지배 세력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억누르고 독재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극우 이념을 실현시켜나가면서 국민 대중을 끊임없이 사상적 공해에 시달리게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김의수, 1991, 75-77쪽).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 고수를 주장하는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류 언론들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은 오늘날에도, 언론을 통해 사상 검증을 하는 등에서 예증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실증해주고 있다.[12] 사실상, 한국의 언론은 70년대와 80년대의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시민 세력의 편에 서기보다는 권위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수구세력의 편에 가담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이후에도 고도로 강화된 언론권력의 기본 성격을 결정짓는 조건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역사적 조건들은 한국언론이 민주화 이후 획득한 강화된 지위와 권력을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세력화를 지원하는 민주적 힘으로 바꾸질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 것이다(박승관·장경섭, 2000, 104-105쪽).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조선일보≫를 포함한 주류 언론에 의해 생산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강조되는 좌/우의 이념 대결 담론이 한편으로는 주류 언론 자체의 이념적 정체성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언론운동단체가 지닌 운동의 본질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언론개혁의 문제를 좌/우 문제로 부각시키기에는 상당히 취약한 논리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혹은 시민단체가 개진해온 언론개혁의 방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세력사이에는 다양한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선일보≫ 진영에 의해 제기된 좌/우 이념 대결은 결국 주류언론에 내재된 모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언론개혁 요구를

12) 최장집의 사상검증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 층위의 모순과 접합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좌/우 이념적 관계의 문제로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언론개혁의 요구가 견제되고 냉전적인 반공 이데올로기가 부활되는 극우적 법질서를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개혁에 관련된 사회적 담론이 구성되는 방식과 담론의 실천적 효과를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종합해본다면 본 연구는, 언론개혁 관련 스트레이트 뉴스 담론의 경우 신문들이 언론개혁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의 표현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함으로써 담론 생산 양식이 상당 부분 왜곡된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신문사마다 지향하는 방향, 가치판단,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원의 선택이나 기사제목 등의 활용을 통해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과장, 축소 및 배제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스트레이트 뉴스가 언론개혁 담론을 구성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사설이나 칼럼에 의하여 구성된 담론 분석에서는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신문이 '조세정의 : 언론 탄압' '공정경쟁 : 자유 경쟁'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자유 : 신문사의 자유' '민주언론 : 자유 언론'이라는 대립되는 의미들의 담론적 투쟁을 통해 어떻게 언론개혁의 요구를 반공 이데올로기 층위의 모순과 접합시켰으며 이를 통해 어떻게 개혁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언론개혁 이슈를 둘러싸고 일어난 한국 사회의 국민적인 갈등이 신문이 생산해낸 사회적 담론의 의미처럼 국민간의 이념적 간극이 깊어서라기보다는 현실정치와 관련된 소수의 극좌와 극우

가 이념적 표어를 사용해 신문사의 자사 이익과 정치적 세력화를 위해 남용하면서 야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입각해 본다면, 신문사들이 신문지면을 통해 언론개혁에 관련해 한국 사회에 불필요한 이념적 논쟁을 촉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단지 소모적인 국민적 갈등만 부추길 뿐 언론 개혁 이슈의 본질을 희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오늘날의 소위 '언론개혁' 정국에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일정 부분 억제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도 분단의 상처로서 엄존하는 좌파=빨갱이 의식과, 보수=수구 내지 반민주=반민족을 연상하는 국민적 정서 속에서, 언론개혁 담론의 논의의 핵심은 이념 담론에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도 개선에 관련된 담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사실상 언론개혁의 좌/우 논의와는 별개로 친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 진보 이념은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내재할 수 있는 불공정 게임을 견제하며, 진행중인 사회관계의 민주화를 이루는 장치로서, 보수 이념은 급진적인 변화에 수반될 수 있는 무질서를 견제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장치로서 상호 수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종일은 "한국의 이념 갈등과 보편민주주의"라는 글에서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성찰해볼 때, 한 사회의 이념적인 갈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한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 첫째, 문민도(civility)가 높아야 하는데 이것은 언어나 기타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이지 않게 행동하는 수준을 말한다. 둘째, 실용주의적 태도(pragmatism)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에 관한 한, 이들을 이념적인 원칙들과는 별개로 능률과 효과 위주로 처리하려는 태도에 대한 합의 정도를 말한다. 셋째는 정치적인 능력(politics)이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가 견해와 이해관계의 심각한 대립이 있을지라도 사회질서의 붕괴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990, 32쪽).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념에 관한 공론화는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숙시킬

필요가 있으며, 오늘의 언론개혁 담론에서 비롯된 이념 담론은 진보와 보수이념을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의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명구·박상훈 (1997).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제31집, 123-161.

강형철 (1999). 신문보도의 주관성과 객관성. ≪언론과 사회≫, 제26호, 113- 146.

김동규 (2000). 언론 개혁과 언론 보도: 신문개혁 관련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4호, 47-88.

김의수 (1991). 한국의 보수주의, 그 역사와 이념. ≪사회평론≫.

나종일 (1987). 한국의 이념갈등과 보편민주주의.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8집. 21-31.

박정순 (2000). 뉴스의 객관성과 이념성.≪언론과 사회≫, 제29호, 6-42.

박승관·장경섭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국가-언론 관계 모형 변화. ≪한국방송학보≫, 제14-3호, 81-111.

박호성 (1989. 7).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한국적 보수주의. ≪언론과 비평≫, 24-31.

유팔무 (1991. 10). '작은 두 얼굴': 중산층의 보수 성향. ≪사회평론≫.

윤영철 (2001). 언론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쟁: 언론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2001 한국언론학회 언론개혁의 쟁점과 이론적 조망 세미나 자료집≫, 1-14.

원용진 (1988), ≪한국 언론민주화의 진단: 1987-1997년을 중심으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임영호 (2001). 한국 비판언론학의 문제설정: 반성과 전망. ≪2001 한국언론학대회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113-129.

조항제 (2001).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6호, 168-204.

Dijk, T. A. S. (1988). *News as discours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Hall, S., et al. (1978). *Policing the crisis*. London: Macmillan Press.

Hall, S., et al. (1996). 이데올로기의 제문제. 임영호 (편역),≪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29-59쪽). 서울: 한나래. (원저 출판년도 1983).

Hall, S., et al. (1996). 의미작용, 재현, 이데올로기.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 이론≫ (61-101쪽). 서울: 한나래. (원저 출판년도 1985).

Hall, S., et al. (1991). Old and new identities. In A. D. King (Ed.), *Culture, globalization and the world system* (pp. 41-68). London: Macmillan.

Hanczor, R. (1997). Articulation theory and public controversy: Taking sides over NYPD Blue.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4(1), 1-30.

Laclau, E. & Mouffe, C.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Verso.

A Discourse Analysis Related to the Media Reform

A Case Study of *Chosun Ilbo* and *Hankyoreh Shinmun*

Jae-Chorl Chung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how and why Chosun Ilbo and Hankyoreh Shinmun produce particular social discourses about the media reform in different ways. In doing so, this paper attempts to disclose the ideological nature of media reform discourses in social contexts. For the purpose, a content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analysis of straight news, while an interpretive discourse analysis was appled to analyze both editorials and columns in newspapers. As a theoretical framework, an articulation theory was applied to explai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forces, ideological elements, discourse practices and subjects to produce the media reform discourses. In doing so, I attempted to understand the overall conjuncture of the media reform aspects in social contexts. The period for the analysis was limited from January 10th to August 10th this year.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the media reform were obtained from the database of newspaper articles, "KINDS," produced by Korean Press Foundation, in searching the key word, "media reform". Total articles to be analyzed were 765, 429 from Hankyoreh Sinmun and 236 from Chosun Ilbo. The research results, first of all, empirically show that both Chosun Ilbo and Hankure Synmun used straight news for their firms' interests and value judgement, in selecting and excluding events related to media reform or in exaggerating and reducing the meanings of the event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a greater or less degree between two newspaper companies. According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monopoly of newspaper subscriber by three major newspapers in Korean society could result in the forming of one-sided social consensus about various social issues through the distorting and unequal reporting by them. Second, this paper's discourse analysis related to the media reform indicates that the discourse of ideology confrontation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produced by Chosen Ilbo functioned as a mechanism to realize law enforce-

ment of the right in articulating the request of media reform and the anti-communist ideology. It resulted in the discursive effect of suppressing the request of media reform by civic groups and scholars and made many people to consider the media reform as a ideological matter in Korean society.

[Keywords: media reform, discourse analysis, discursive effect, articulation]